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외세와 자주통일의 과제

홍 근 수

(회원, 자통협 상임공동대표)

시작하는 글 : 2002년 - 전쟁의 위협이 격화되는 해?

반테러의 명목 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 반도에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여기서 인용한 글은 이북의 2002년 신년사에 나타난 글의 일부이다. 이는 이북 당국이 남·북 정세, 즉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의 한반도의 정세를 정말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한반도 상황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상황은 정말 긴장이 격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새해를 전망하면서 2002년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아프간 전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이고 21세기의 첫 번째 해였던 2001년 말에 새해를 전망하면서 2002년은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02년을 ‘전쟁의 해’로 규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이 하기에 따라서는 평화가 실현된 세계, 또는 전쟁으로 가득 찬 세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단극체제에 의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패권을 장악,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삼겠다는 의지 표명과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세는 실로 ‘전쟁’의 긴장이 높아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로 부시는 1월 29일에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북을 ‘악의 축’이라 하고 북에 대하여 군사적인 공격을 할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이는

하필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겠지만, 연두교서 발표 직후인 2월 18일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부시는 한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저항을 받았다. 그러한 상황을 맞아 그는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북을 군사공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을 밝혔다.³⁴⁾ 아마 지금 당장은 이라크가 군사공격의 목표이고 북은 그 다음이며 또 한국민의 저항이 거세어서 우선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다.

셋째로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이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지금까지 남한의 햇볕정책이나 클린턴 행정부의 온건정책(soft-landing policy)을 청산하고 더 이상 종전의 민주당 대북 온건정책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것, 북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일관되게 내세워 왔다. 그것은 마치 종전 민주당 정권이 북에 끌려다닌 것처럼, 북에 퍼붓기식으로 북을 일방적으로 도운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미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아니면 다른 나라들의 전쟁을 부추겨서 군사무기를 팔아먹는 방식으로 나라를 존립케 해나가기로 한 나라이다. 비록 남한의 국민 일반은 미국을 거의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있거나 ‘전쟁 불감증’ 같은 것에 걸려 있는 듯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실상은 언제 미국의 폭탄이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 가운데는 미군의 공격으로 북한정권이 붕괴시키고 흡수통일을 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한반도는 매우 좁은 땅이어서 여기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피아 구별 없이, 북한의 김정일과 ‘빨갱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멸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 당국은 이미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전쟁 발발 후 첫 두 달 안에 10,000명의 미군, 1,000,000명의 한국인이 희생된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반드시 핵전쟁을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고 보면 비록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지 몰라도 우리 민족은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냉철한 현실적인 계산일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을 맞고 있다. 가령 연합토지 관리 계획이다. 미군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명분으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4천여 만 평을 한국 측에 돌려주는 대신에 주로 도심지의 땅 6백여 만 평을 미국에 공여해 달라고

34) 한겨레, 2002.2.21, 1쪽.

요구하였고 이것이 곧 타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F-X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미국의 F-15K를 강제로 구입하려는 강수를 쓰면서 온갖 문제들이 돌출하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공군의 조주형 대령을 기밀누설과 횡령혐의로 구속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을 겨냥하여 과거 팀 스피리트 같은 무리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려 하고 있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북은 이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월 18일에는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이 방한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중요성을 보고 있는 미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의 역할을 중요하게 전제하고 있고 아시아에 유사시 일본군을 재무장하고 해외에 파병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정책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아시아에의 진출 배경에는 일본군을 통한 미국의 아시아 지배가 전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구상을 일본은 전적으로 동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새 밀레니엄의 시대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그의 전쟁광적인 기질은 우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돌적이고 충격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북의 신년사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반테러의 명목 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 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 반도에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불안과 긴장이 있다.

조·미 : 전쟁이나 대화나?

위에서도 지적했지만, 북 당국은 9.11 테러 상황 이래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로 대미정책에 있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9.11 테러 이후 북은 테러를 규탄하는 입장을 취하여 우선 9.11 테러 감행자 - 그것이 누구인지 모르나 - 와 거리를 둔 것은 물론이지만, 침략전을 감행하는 미국의 무력공격을 피하려는 듯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의 국가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최근 부시의 ‘악의 축’ 국가 운운은 조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금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인식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언론이나 조야에서는 다 같이 북한을 국제 테러리스트나 깡패국가 또는 불량국가로 단정하고 경제제재와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을 잊지 말자는 주장이 미국 행정부의 목소리이고 미국 언론의 목소리인 것 같다. 주로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 때문이겠지만, 지금 한반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전쟁 발발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하여 이북 당국은 물론 강경한 어조로 이를 규탄하고 있지만,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북한 당국의 말은 또 무엇을 뜻하는가? 비록 미국이 대화단절을 원할지라도 이북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여운을 남기고 있는 듯하다. 또 한편 공화당 부시 정권 출범 이래로 계속 북에 대해 취해 오던 강경 자세는 최근에 와서 북과의 대화를 선호하고 환영하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 같은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부시의 거듭되는 ‘무조건적인 대화’ 제안이나 ‘대북 대화를 고위급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미 국무부 온건파의 의견 등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월 23일 주유엔(주미국) 북의 대표부 차석대사의 기자회견에서 전직 주한 미 대사들을 다음달 평양으로 방문할 것을 초청, 발표한 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도 불구하고 북은 온건정책으로 나오는가를 관측하게 하였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그것이 무산되었다. 이는 현재 북의 대미관계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것 같다. 부시가 체한시 다행히 남한의 햇볕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에 대하여 무력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재야와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한국민의 무서운 여론에 일단 불을 끄는 듯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부시가 전방이나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악마 운운한 것을 보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악마나 또는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실제 의도, 미국의 선전이나 감언이설 등에 넘어가서 감추어진 진짜 미국의 검은 의도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중국 방문과 함께 부시의 방한은 결국 대북 강경책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利害) 당사국들에게 설득하려 들 것이라는 것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또한 북의 대미자세에서도 특히 악의 축 발언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작 등에 자극받은 북 당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더러 종전 민주당 정권과 북 사이에 합의된 것을 존중하고 부시의 강경일변도 정책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치적인 ‘언사’(rethoric)와 구체적인 정책은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정치적인 ‘언사’와 실제 당국이 추구하는 정책 사이에는 괴리가 있음을 우리는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이에 대한 이북의 불타협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조미간에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나 명년인 2003년은 낙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년은 미국이 북에 경수로를 완공하여 주기로 약속한 해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미국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 나간다면 아마도 2009년 말에나 완공을 전망해 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북의 미사일개발 유보일자가 또 명년 말이다. 그렇다면 어쨌건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견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갈 가능성마저 있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적이 우려된다.

지금 미국은 매우 오만하다. 특히 대아프간 테러 이후에 그것이 절정에 달한 것 같다. 대아프간 전에서 미국 편이 되라는 요구의 일환이지만, 이 요구에서 미국은 세계 각 나라에 대하여 테러리스트 편이나 미국 편이나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를 제쳐놓은 지 오래다. 미국은 순전히 자국의 이해관계, 즉 세계패권 장악과 이의 지속적인 관계, 전 세계를 미국의 패권 하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힘의 강경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것이 유럽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선되는 듯하던 조미 관계는 미 공화당 출신의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에 의해 다시 경색되고 있다. 남한의 많은 사람들은 조미 간에 전쟁이나 무력 분쟁 등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지금은 힘만 믿는 오만한 부시 정권이 미국의 집권세력이고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낙관할 수 있을까? 지금 부시 정권 하의 미국은 힘--경제적 힘, 군사적 힘, 그리고 과학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힘의 강경외교를 펴고 있으면서 북한 같은 나라를 차제에 근본적으로 ‘손’을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조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국과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쟁이나 아니면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 대아프가니스탄 전 때문에 세계적으로 받고 있는 비판을 의식하고 또 다시 북에 대하여 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조건 하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인가의 귀로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 이를 위해 미국은 강경일변도로 조미관계를 설정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해 약하게 나오지 않을 북을 생각하면 한반도 정세는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우리의 불안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합의 공동선언과 통일논의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정책 대신에 그것을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음은 물론 그 약법에 의해 사람들을 계속 구속하고 재판하고 감옥에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일로는 작년 8.15 때 방북한 대표들 중 7인을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체포하였고 지금도 그 중 6명은 보석으로 밖에 나와 있고 1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서 볼 때도 그렇다.

지난 2월 7일 서울지법에서는 범민련 관계자 6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통일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는 만경대 방명록 사건으로 기소되어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재판 결과도 우려케 하고 있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물론 햇볕정책과 전혀 양립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서해 교전을 일으켰고 군사적 안보를 내세우면서 북한의 인민군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국방책임자로 하여금 국회에서 증언하게 한 김대중 대통령 정권으로서는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남한에 미군의 무력증강, 월드컵 대회를 대비한 한미공동협의기구 설치와 운영, 한미연합사 안에 MD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상당수의 한국군의 영관급 군인의 참여, 미국이 북을 겨냥하여 F-15K를 남에 강매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한미군사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 통일 후에도 미군은 아시아의 안정을 위하여 계속 한반도 주둔 등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무엇인가? 이것들은 모두 북한을 겨냥한 것이다. 지금 미국의 대한반도전쟁은 가능성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즉각적이며 현실적인 위협이란 것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첫째 F-15K 40대를 미국 보잉사로부터 구입하는 것, 둘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발전소 사유화(민영화) 강행이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마당에 이것들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상사’인 미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프간 테러가 나자 양민학살 등의 이유로 미국의 대아프간 전을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는 북의 입장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입장을 남한 당국이 취하고 있는 것은 주목하게 된다. 김대중 정권이 침략전을 감행한 미국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한국군의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그 전쟁의 종결 마당에서 한국군 파병 등을 감행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이 푸에블로 호를 나포했을 때 군사력으로 북을 공격하도록 미국에게 요청한 반통일의 가장 전형적인 군사독재자인 박정희 기념관 설립의 명예 회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군의 용산기지 내 평당 9백만 원 소요의 미군 숙소용 아파트 건립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물론 6.15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거둬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연합사 내에 MD 기구를 창설하고 이에 영관급 이상의 상당수의 한국 군인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창설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³⁵⁾

그러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남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그의 방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이 안 되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지금 남한의 직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방남(訪南)하려면 6.25 등에 관해 반드시 사전에 사과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세력들은 김정일 위원장이 방남하면 납치하고 체포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기는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속하고 있는 한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 위원장을 체포,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라는 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닐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적어도 북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이행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야당의 취방으로 안 된다고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천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말로만이 아닌 우리 민족공조체제를 사실상 실시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북의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35) 시민의 신문, 2002.1.14~20, 1쪽.

북의 김정일 위원장이 미군의 주둔이나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양해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만일 그랬다면 남북 정상은 6.15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는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북의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이 성사되고 ‘성공적’인 방남을 마치고 무사히 평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나 우리 민족의 통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6.15란 결국 집권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에 지나지 않음이 입증되는 것일 뿐이다.

만일 이남 당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 이전에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을 막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남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책임을 북에 전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아 떳떳하지 못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이 이루어져서 현재의 남북간의 교착상태를 돌파하려면 적어도 이남은 최소한도 위에서 지적한 것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거짓 없는 김 위원장의 방남을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작년 9월 11일에 미국내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세계 평화를 깨고 부정하는 몇 가지 결정적인 행동을 신속하게 실천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군사비의 엄청난 증액이다. 그들은 전년도의 3천억 불이 채 못 되던 군사예산을 무려 516억 불이나 증액하여 3,422억 불의 군사예산을 세웠다. 이는 국방비의 약 17%의 인상을 의미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는 레이건 대통령 때의 최대액의 국방예산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번째로 군사예산이 많은 나라의 2배, 아니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군사예산을 다 합쳐도 미치지 못할 만한 거액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MD 계획 실천을 선언하고 이의 제약을 의미할 수 있는 미소간의 ABM 조약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했으며, 핵무기 개발 동결 방침도 철회한다는 방침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이 세계를 무한군비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일 뿐이다. 실로 제정신이 아닌 전쟁광의 언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는 온 세계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확대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으로 9.11 테러를 빙자하여 대아프간 전쟁을 시작하였고 또 전 세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아프간 전을 끝내는 대신에 그 전선을 다른 곳으로 확대하여 전쟁을 계속하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금 미국은 소말리아, 이라크, 북한 등에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 세계가 미국에 걸고 있는 기대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현실이다. 미국은 평화비용이 전쟁비용보다 더 비싸다거나, 오직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 과학력 등 세계 타국들의 추종이 불가능한 힘에 의존하면서 세계를 자신의 독점적 패권 하에 두려는 국가정책을 펴고 있다.

더구나 위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1월 말의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마적인 국제 테러리스트 국가로, ‘악의 축’ 국가로 몰고 이러한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였다. 이는 결코 우연한 발언이거나 실수가 아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북한이 다음 전쟁의 목표가 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연두교서에서 중국을 악의 축 국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중국을 미국의 잠재적인 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한미군의 명분을 앞으로 불원간 있게 될 미중 대결 관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또 주한미군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의 관철, 즉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의 장악과 지속적인 관철을 기하자는 데 있음은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다. 그것은 미국인이 자신들의 문서나 구두로 표현한 데서도 명백히 실증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주한미군의 영구적 주둔의 목적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발표된 올해 초에 미 국방부가 제출한 한 비밀보고서에서 북 등 7개국에 대해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는 긴급 대비책을 수립해 놓았다는 사실³⁶⁾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맥락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의 21세기 아시아 정책이란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의 21세기 아시아 정책을 거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거시적으로 보아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미군 100,000명을 주둔시킨다는 근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

36) 한겨레, 2002.3.11, 1쪽.

는 한, 주한미군의 철수 운운은 헛소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리고 혹 미군 8군사령부의 장소를 서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니까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제한시 다행히 남한의 햇볕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북한에 대하여 무력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은 재야와 시민단체들을 비롯한 한국민의 들끓는 여론에 일단 불을 끄는 듯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부시가 전방이나 미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는 여전히 북한에 대하여 악마 운운한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악마나 또는 테러리스트로 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진 의도, 미국의 선전이나 감언이설 등에 넘어가서 감추어진 진짜 미국의 검은 의도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본·중국 방문과 함께 부시의 방한은 결국 대북 강경책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利害) 당사국들에게 설득하려 들 것이라는 것을 능히 추측할 수 있다.

맺는 글 : 우리의 과제

분단 반세기가 넘는 2000년 6월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성사되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그들의 합의인 소위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는 자못 크다. 그 동안 의미 있는 남북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72년의 7.4 남북공동선언, 91년의 소위 남북기본합의서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얼마 가지 않아 자의, 타의에 의해 휴지화되었다.

무엇보다도 존폐의 위기 상황에 있는 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우리 민민운동 진영이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믿는다. 6.15 남북합의는 사실상 남에 의해서는 물 건너 갔거나 휴지화된 현실이나 마찬가지다. 아마도 김대중 정권은 그것을 이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권일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의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 내에 극적인 방남과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는 추측도 없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1년 내로 퇴진이 예상되는 말기 정권, 더구나 정권 재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이 적극적인 접촉을 하겠는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6.15 남북합의는 2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아직도 남북 어느 쪽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남북의 정권 차원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 같다. 특히 평화적인 민족분단 관리를 추구해 왔다고 보여지는 김대중 정권에게서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남한의 흡수통일에 저항하면서 민족자주와 평화적인 통일방식, 그리고 차기 정권 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는 한나라당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 햇볕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남한을 지금도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미국의 부시처럼 힘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북과 통일 협의를 하자면서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으니 말이 되는가? 6.15 합의를 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은 아직도 통일을 위하여 일하던 민족주의자들을 석방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임기 중에는 이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은 여전히 이적단체로 되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과 남북 공조 등을 운운하면서도 아직도 북의 남침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된 후에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반복하여 주장하고 있는 최초의 남한 대통령이 되고 있다. 그는 사실상 미군의 영구주둔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남북간의 공조와 협의를 말하면서도 북의 남침을 전제로 하고 적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한미안보조약 등으로 국가안보를 도모하고 군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6.15 남북합의를 내세우고 햇볕정책을 내세우는 김대중 정권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한·일 합동군사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한국군의 주적은 북한 인민군이라고 국회에서 국방책임자가 답하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자국의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이북을 ‘악의 축’ 국가로 몰아세우고 전쟁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미군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미군 주둔 때문에 이 땅은 전쟁 위기가 늘 있고 미군 주둔 때문에 통일이 안 되며 민족자주가 실현되지 않는다.

적어도 이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평화와 통일은 요원해지리라는 것, 6.15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분단된 남북 민족간에 큰 위기가 오리라는 것, 민족의 화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곧 이 분단의 땅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고 이 길만이 이 분단과 적대의

땅에서 의미 있게 사는 길임을 깨닫고 투쟁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 화해와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민민운동 진영이 앞장서서 남북간에 화해, 평화, 마침내 통일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세를 이 땅에서 추방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길은 이러한 위험한 민족 현실에 바른 눈을 뜨고 진정으로 평화에 이르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투쟁한다면 2002년은 우리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한 위기상황은 바뀌질 수 있고 우리 민족사의 방향은 바뀌어지리라 믿는다.

사월혁명회보 제64호(2002.4)